

기로에 선 북핵 문제

최진욱

북한연구실 실장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살리기 위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0월 1일부터 3일간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부시 행정부 임기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힐 차관보의 이번 협상노력은 북핵문제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결과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보도에 의하면 힐 차관보는 영변 핵시설을 검증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임시'로 해제하고, 핵무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확산 활동 등은 차후에 검증하는 '분리검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남북한 상호사찰과 이를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달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벼랑끝으로 내몰려왔다. 부시행정부가 8월 11일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자 북한은 핵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하였고 8월 24일에는 일주일내 재처리시설의 재가동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기지의 발사시설을 개보수하고 2년전 핵실험을 하였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복구도 진행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고조를 극대화시키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가깝게는 2007년의 2.13합의와 10.3합의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거부하자 미국이 2008년 4월 8일 싱가포르합의에서 신고문제를 편법으로 처리한 데 기인한다. 즉, 북한이 신고를 거부하는 농축우라늄과 핵확산에 대하여 미국이 대신 신고를 하고 북한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편법신고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부시 행정부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신고하지 않은 핵프로그램까지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검증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북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가급적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여 왔다. 따라서 검증과 폐기가 본격화될 비핵화 3단계에서 북·미간 갈등은 이미 예상되었으나, 그 시기가 검증방법에 대한 논란으로 앞당겨졌을 뿐이다. 8월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이며 검증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핵무기 폐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할 검증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남북한 상호검증을 강조하였다. 지난 힐 차관보 방북시 북한이 '남북한 상호핵검증'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의 이번 벼랑끝 전술은 몇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시 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

여 ‘철저한’ 검증 대신 적당한 선에서 느슨한 검증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북한은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정치적 업적으로 간절히 원하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단계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임기내 북한의 플루토늄이 3-4배 증가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둘째, 부시 행정부와 타협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은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협상을 위해 불능화를 원상복구시킴으로써 몸값을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대로 ‘분리검증’안이 타결된다면 핵무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은 다소 지연되겠지만 결국 ‘진실의 순간’은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임기말 시간에 쫓겨 검증문제를 또 다시 소홀히 할 경우 북핵문제는 견잡을 수 없이 안개 속으로 빠질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싱가포르에서 편법을 통해 타결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일단 플루토늄의 추가추출을 방지하고 불능화라는 정치적 업적을 얻는 것이 무엇 보다 절박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검증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우리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만일 북미간에 ‘분리검증’이 타결된다면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확대의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과연 우리가 상정하였던 바로 그 환경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편, 부시 임기내 검증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2단계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당분간 북핵문제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고 외교안보라인이 정비되어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우리로서는 미국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는 이 기간 우리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굳건한 한미공조의 틀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과의 외교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북한의 식량난, 김정일의 건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2009년은 한반도 운명과 관련하여 중대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